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14. 5. .	
연월일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병 규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5.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정부조직이 국가안전처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춰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을 국가안전처장관이 행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안 제6조 신설)

국가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안 제10조의2, 안 제10

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형재난의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및 재난현장 특수기동구조대 파견(안 제14조, 제1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수습에 필요한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기동구조대를 운영하여 긴급구조 등 신속하게 재난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안 제17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 종료 이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다.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27조)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에서만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자·관리자 등이 스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바. 안전 점검업무 수행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안 제32조의 2 신설)

안전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안 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지정·운영 등(안 제66조의3, 제66조의5)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차.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안 제66조의1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기준 등을 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카.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우대(안 제76조의3)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수당 및 가점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도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 및 해양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9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군·구(자치구)”를 “시·군·구(자치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① 국가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②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제77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기관 경고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사고의 예방사업”을 “안전관리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을 “국가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별로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과위원회의”를 “실무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국가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재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국가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로,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를 “국가안전처에 중앙재난대책본부(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안전처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해당연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제9조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증장기 투자 방향
2.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증진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회의”를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고, 국가안전처장관이 차장이 되는 중앙대책본부를 둔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만을 편성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5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과건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안전처 소속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안전처 소속의 특수사고대응 인력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 파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중앙사고수습본부)”를“(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5조의2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수습본부장”을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로, “말한다”를 “말한다”를 지원하거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지역재난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도재난대책본부”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군·구재난대책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지역재난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괄·지휘 및 조정”을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의 통합지휘) ①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여한 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이하 “재난현장 참여기관”라 한다)은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다만,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에 관하여는 제56조를 따른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 지휘를 이양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나 재난현장 참여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에 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

본부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된 후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재난현장의 수습활동에 관한 총괄·조정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행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및 종합하여 국가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을 “해양”으로,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를 “보고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서장은”을 “소방서장, 해양안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제18조 제1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가안전처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치 결과 및 안전점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경관리대상시설등의 지경,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국무총리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제30조”를 “제27조제3항에 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국무총리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유형”을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재난유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기관”을 “해당 재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를 “국가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후단 및 제7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6을 제34조의7로 하고,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국무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국무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및 제5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및 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법경찰관리 직무) 제30조 및 제32조 따라 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기상황 매뉴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의 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우려되어”로,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를 “재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을 “재난사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을 “다만, ”로,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없을 때”로,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를 “선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2항”을 “시장·군수·구청장, 제50조제2항”으로,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을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긴급안전조치”를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람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보의”를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38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미리”를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응급대책”을 각각 “응급조치”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을 “국가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사항은”을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장과 협의하여야”를 “장이 적극 협력하여야”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난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재난피해의 조사)”를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61조 중 “응급대책”을 “응급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유발한 원인자가 가입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를 “긴급구조활동과 응급조치·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급대책·복구”를 각각 “응급조치·복구”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복구사업”을 “재난복구비용”으로,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바”로, “안전행정부령”을 “국무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구호”를 “구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생계안정”을 “긴급생계안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지역재난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의3의 제목 “(안전점검의 날 등)”을 “(국민 안전의 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로,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를 “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과 있는 학생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의8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의9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의10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장에 제6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①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한다.

② 제1항의 특별교부세 신청, 교부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을 따른다.

제6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재해연감”을 “재난연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재난수습이 완료되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대응 백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가안전처”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국무총리훈령”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우대 등) ①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이하 “재난관리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재난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인사 상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를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로, “직원”을 “임직원”으로, “통보”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을 “지역통제단장”으로, “통보”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원에 대한 문책 등”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을 “국가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없어”를 “없이 제27조제3항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경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3항 중 “5월 31일”을 2014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6월 20일”로 하며, 2015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6월 10일”로 하고, 제10조의2제4항 중 “6월 30일”을 2014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7월 20일”로 하며, 2015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7월 10일”로 한다.

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
----- 국가안전처

④ -----
----- 분과별로 실무위원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실무위원회의 -----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국가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

기획재정부장관과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안전처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해당연도 예산요

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제9조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

2.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국가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

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국가안전처장관-----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③·④ (생략)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 ③ (생략)

④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

----- 국가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
----- 이 경우 -----
----- 상황에 대하여는 -----
----- 장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안전처장관 -----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긴급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에게 구조대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

-----.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① 국가안전처장관 -----

다.

② ~ ④ (생략)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 조사를 한 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중 사망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 응급조치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유발한 원인자가 가입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 긴급구조활동과 응급조치·복구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안전처장관-----

④ 국가안전처장관-----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국가안전처장관-----

② 국가안전처장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생략)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처장관-----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안전처장관-----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국가안전처장관-----

② (생략)

<신 설>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①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한다.

② 제1항의 특별교부세 신청, 교부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을 따른다.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국가안전처장관-----

② -----
----- 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생략)

②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해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안전처장관-----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안전처장관-----

③ 국가안전처장관----- 재난연감-----

④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연 락 처	(02) 2100 - 1816